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매뉴얼

2021. 10.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목 차

I. 법 적용 이후 달라지는 점	1
II. 직장 내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자료	6
III. 제도 운영에 따른 신고 등 절차	12
IV.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32
1. 법 적용 대상	32
2.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10가지 행위 기준	32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	33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38
③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39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40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41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42
⑦ 가족 채용 제한	46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48
⑨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50
⑩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52
3.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54
4.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역할과 제도 운영	57
5.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58
V. 법령 비교	61

I. 법 적용 이후 달라지는 점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과 비교]

구분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2022. 5. 19. 시행)
법령 위반 시		징계	징계 + 형벌, 과태료
적용 대상		공무원	공무원 + 공립학교 소속의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직원, 공무수행사인
사적 이해 관계	신고 절차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 회피신청
	조치 사항	[소속 기관의 장] 재량행위 “~ 조치할 수 있다”	[소속 기관의 장] 기속행위 “~조치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X	신설
고위 공직자 민간 분야	대상 범위	고위공직자(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 가족채용, 수의계약체결 제한 등 적용 민간분야에 재직하였던 업무내용	좌동 +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범위 확대 ※ 가족채용, 수의계약체결 제한 등 적용
	제출 범위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좌동 + 대리·고문·자문 등 내역
	공개 여부	X	공개(재량행위) ※ 단,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않는 범위 내
가족채용 제한		업무담당자,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업무담당자, 고위공직자 ※ 본인, 가족, 특수관계사업자 포함	좌동 +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단체(추가)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 이용 금지 대상		공무원	공직자 + 제3자 ※ 재산상 이익 환수 근거 마련
직무 상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대상		공무원	공직자 + 제3자 ※ 재산상 이익 환수 근거 마련 ※ 제3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가족의 범위		본인, 4촌 이내의 친족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등 조문별 가족의 범위를 달리 정함(3쪽 표 참조)

☑ 위반 시 제재기준 강화

- ⇒ 기존 공무원행동강령상 징계대상인 제한 및 금지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라 위반 시 제재기준이 강화되어 징계처분과 더불어 형벌(형사처벌 및 벌금), 과태료 및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 됩니다.

☑ 이해충돌 방지 적용 대상이 공무원에서 공직자로 확대

- ⇒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적용 대상이 공무원에서 공직자(국공립 각급학교의 경우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 교직원)로 확대됩니다.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일부 변경

- ⇒ [신고절차] 수행평가, 우수자 선발 등 16가지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동시에 회피를 신청(의무사항)하여야 합니다.
- ⇒ [조치사항] 소속기관의 장은 공직자의 직무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수행 일시중지, 대리자 지정, 직무 재배정 등 별도의 조치(의무사항)를 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내역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 민간분야 업무활동 제출 범위 확대

- ⇒ 고위공직자 범위를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을 포함하여 확대하였습니다.
- ※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에 공통 적용
- ⇒ 3년 이내 민간분야에 재직하였던 업무내용과 영리행위 이외에 대리·고문·자문을 한 경우까지 제출범위가 확대되었고,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익계약 체결 제한 대상 범위 확대**

⇒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로,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및 감사조사권이 있는 지방의원 등과 그 가족이 제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제한 대상 범위에 있는 계약업무담당자, 고위공직자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도 새롭게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금지 대상 확대**

⇒ 적용범위를 공무원에서 제3자까지 확대하고,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 **직무상 알게된 비밀 등 이용 금지 대상**

⇒ 적용범위를 공무원에서 제3자까지 확대하고,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에 대한 환수 및 처벌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 **가족의 범위 조문별 구분**

⇒ [가족의 범위] 「공무원행동강령」은 사적이해관계자를 공무원 자신, 4촌 이내의 친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조문별로 가족의 범위를 아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조문	「이해충돌방지법」 상 조문별 가족의 범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제5조)	1. 배우자 2. 공직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3.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가족채용 제한(제11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1. 배우자 2. 공직자의 직계존비속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수익계약 체결 제한(제12조)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	1. 배우자 2. 공직자의 직계존비속(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다시 한번 체크하기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등
- 고위공직자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제한
- 그 외 특혜 배제,이권 개입 금지, 알선 청탁 금지 등

↳ 위반시: 징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 고위공직자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고위공직자 범위 확대)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제3자 포함)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제3자 포함)
- (신설)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 위반시: 징계 + @[과태료, 형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5월 18일 공포되었으며,
2022년 5월 19일 시행됩니다.

II. 직장 내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자료 [공립학교용]

※ (참고) 본 매뉴얼에 수록된 교육자료는 일부 내용만 발췌하였으며, 교육자료 원본 파일은 한쇼파일로 별도 제공됩니다.

직장 내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공립학교용)



목차

- 1 왜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한가?
- 2 이해충돌방지법 개요
- 3 주요내용: 10가지 행위기준
- 4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5 이해충돌방지법 상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 5. 18. 공포되었으며,
2022. 5. 19. 시행됩니다.


1. 왜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한가?

Q. 공무원 행동강령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이해충돌방지법이 포함하고 있는 10가지 행위기준 중, 부동산 보유
매수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9가지는 **이미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만, 가장 큰 차이점은 법 위반 시 행동강령은
징계만 가능했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형벌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이해충돌방지법 개요

[적용대상]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

공공기관	공직자	
헌법기관 - 국회, 법원, 감사원 등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지방의회, 교육청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학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등 임직원 각급 국립학교장과 교직원	
<우리학교 적용범위> 교(원)장, 교(원)감 교사(기간제교사 포함)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운동부지도자 <small>※ 용역계약을 통한 업체 소속 직원은 제외</small>		

3. 주요내용: 10대 행위기준

5개 신고의무와 5개 금지 행위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 행위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6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7	가족 채용 제한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8	수익계약 체결 제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8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3-1.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기피

**신고
회피
/
기피**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무)]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

[이해관계자(재량)]
직무관련자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 공직자를 기피 신청

조치

[소속기관장(의무)]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 직무대리자 또는 공동수행자 지정
- 직무재배정
- 전보

※ 조치 예외 사유

1.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 안전보장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단,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타 공직자가 확인 점검

3-1.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기피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사항(징계, 과태료, 환수 등)

<div style="background-color: #e6ffe6;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의무 위반시 </div> <p>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small>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small></p>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div> <p>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p>
-----------------------------------------------------------------------------------------------------------------------------------------------------------------------------------------------------------------------------	------------------------------------------------------------------------------------------------------------------------------------------------------------------------------

★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하지 않아요!

1.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법률 등의 제정·개정·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예) 교육행정실 민원담당자의 친동생이 생활기록부 발급을 신청한 경우, 사적이해관계신고 예외

3-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직자는
[본인, 가족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와 [직무관련자] 간의 사적인 거래(아래 3가지 유형)를
 사전 또는 사후에 알게 되었을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 특수관계사업자: 자신 또는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물품,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제외	예외) 분양, 구매, 경매, 입찰에 의한 거래행위는 제외	예외) 구매, 경매, 입찰을 통한 계약 제 외, 거래 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 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제외
<div>위반 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 과태료)</div> <div> 사례) 00학년 학습준비물 거래업체인 △문구점에서 공직자 A가 사 적으로 필요한 문구류를 정당하게 구입하였다면, '거래 관행상 불특 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등에 해당하여 신고 제외 </div>		

3-6.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직자는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공직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각종 외부활동을 열거하여 금지**

제한되는 외부활동	※ 적용제외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소속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수수가 허용되는 경우 -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일부 제외
<div>위반 시 (징계 및 1천만원 이하 과태료)</div>	<div> '직무관련자에게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는 것이 사적인 외부활동이 되지 않으려면, 우선 공문 등을 통해 자문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아야 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함 </div>

3-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공직자(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포함)는 직무수행 중 알게된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 사적 이용 금지		제3자는 직무 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됨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없더라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됨		▪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해서는 안됨	
※ 사적이익의 범위: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이익까지 모두 포함.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없더라도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임			
위반 시 (징계 +)	공직자		제3자
	(재산상 이득)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 벌금 +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사적 이용)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재산상 이득)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3-11. 주요내용: 공무수행사인

공무수행사인도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p>공립학교의 공무수행사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각종 심의 또는 선정 등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학부모 위원 등) 	<p>※ 적용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 직무상 비밀 등의 이용 금지 - 부당이익의 환수 등 	
<p>위반 시</p>	<p>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위반</p> <p>(재산상 이득)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 벌금 + 재산상 이익 몰수 추징</p> <p>(사적 이용)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p>	<p>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위반</p> <p>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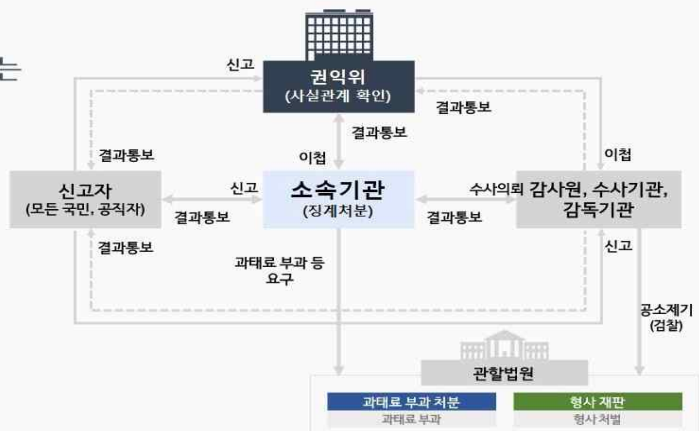
4.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미 발생한 경우 포함)”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속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5. 이해충돌방지법 상담

우리학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교감선생님입니다.

매년 1회 이상
이해충돌방지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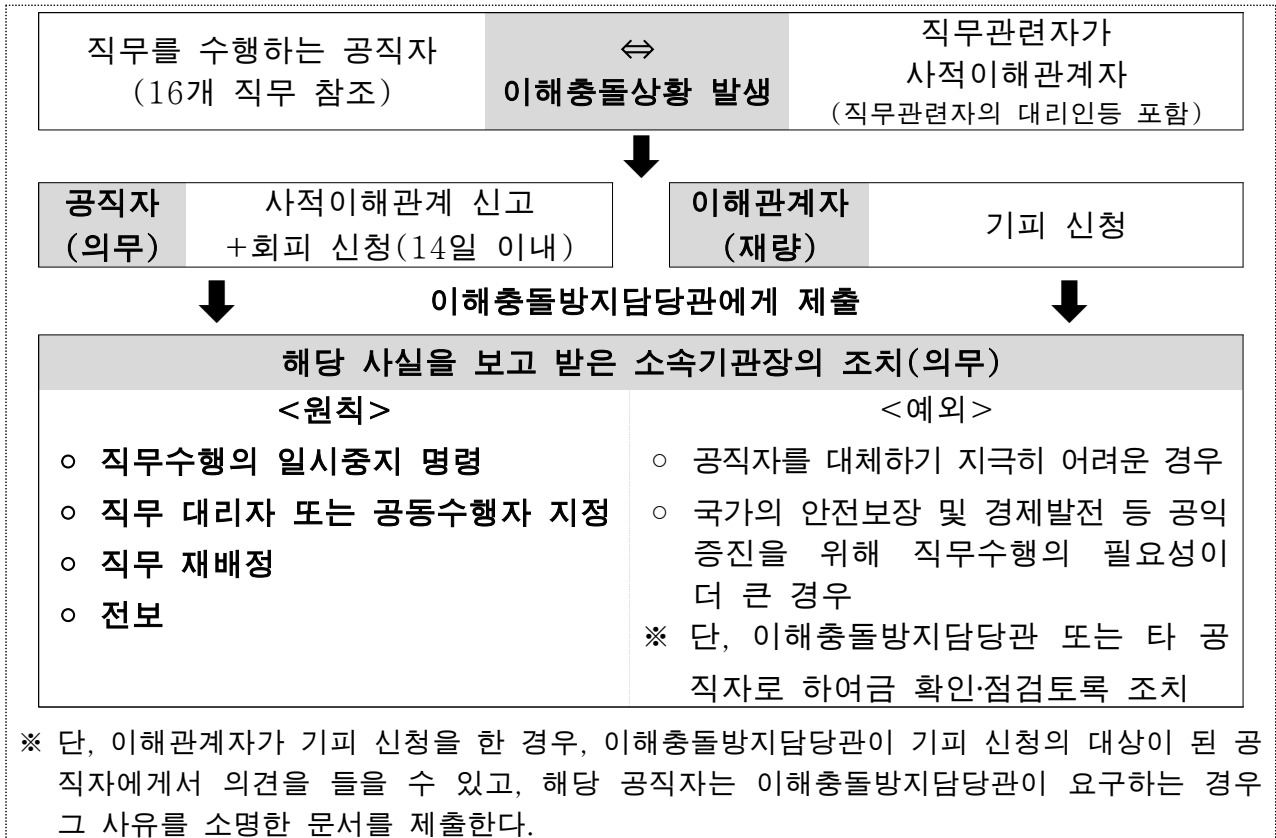
각종 이해충돌관련 상담

각종 신고 및 접수 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업무 담당자 포함)은 이해충돌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III. 제도 운영에 따른 신고 등 절차 [신고 및 조치 절차, 분야별 체크리스트 등]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의 절차와 방법



가. (공직자의 의무)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 제출
(신고+회피) [양식1]

- 공직자의 인적사항(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 직무관련자의 인적사항(성명, 소속, 연락처, 공직자와의 관계)
- 그 밖에 사적이해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나. (이해관계자의 재량)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기피) [양식2]

- ※ 이해관계자: 직무관련자 혹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 업무 담당 공직자의 인적사항(성명, 소속, 직위(직급))
 - 기피 신청 사유 및 사적이해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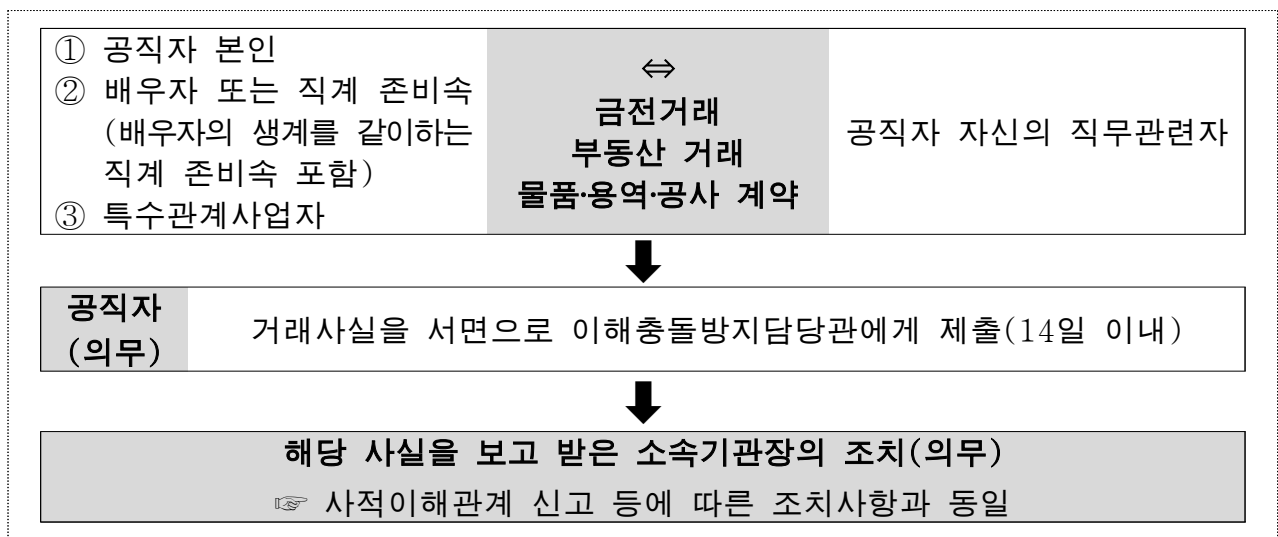
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의무) 신고의 접수 및 검토

-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등의 접수 및 관리
- 신고 내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 소속기관장의 조치 결과를 해당 공직자 또는 기피 신청자에게 시행령에서 정한 기한 이내(3일 예정)에 서면으로 통보
- 사적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라. (소속기관장의 의무) 신고 등에 따른 조치

- 신고를 받은 날부터 시행령에서 정한 기한 이내(7일 예정)에 조치
※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음

2.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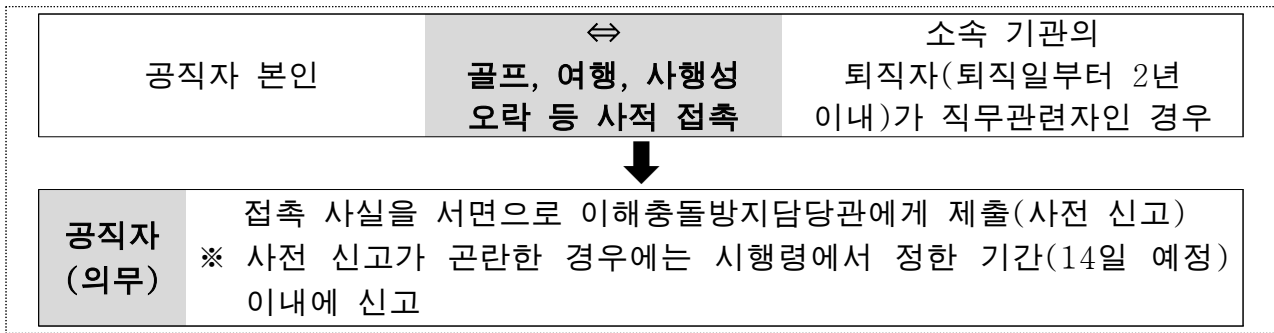


가. (공직자의 의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 제출(거래 신고) [양식3]

- 직무관련자의 인적사항(성명, 소속, 연락처)
- 직무관련자와 거래한 자의 인적사항(성명, 소속, 연락처, 공직자와의 관계)
- 거래일, 거래내용, 그 밖에 거래를 증빙할 참고자료

나.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의 의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따른 조치 사항 준용

3.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및 방법



가. (공직자의 의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 제출(사전 신고) [양식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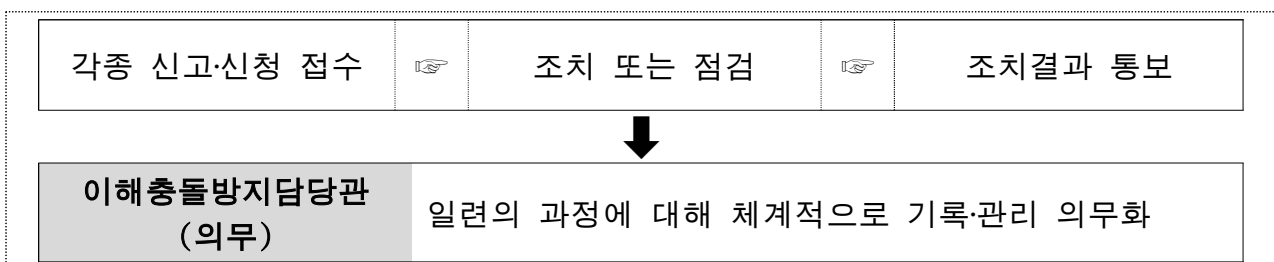
- 공직자의 인적사항(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 퇴직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 접촉사항(접촉 일시, 유형, 사유)
- 그 밖에 신고와 관련한 참고자료

나.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의 의무)

- 퇴직자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충돌상황에 따라 조치
예)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대상의 경우, 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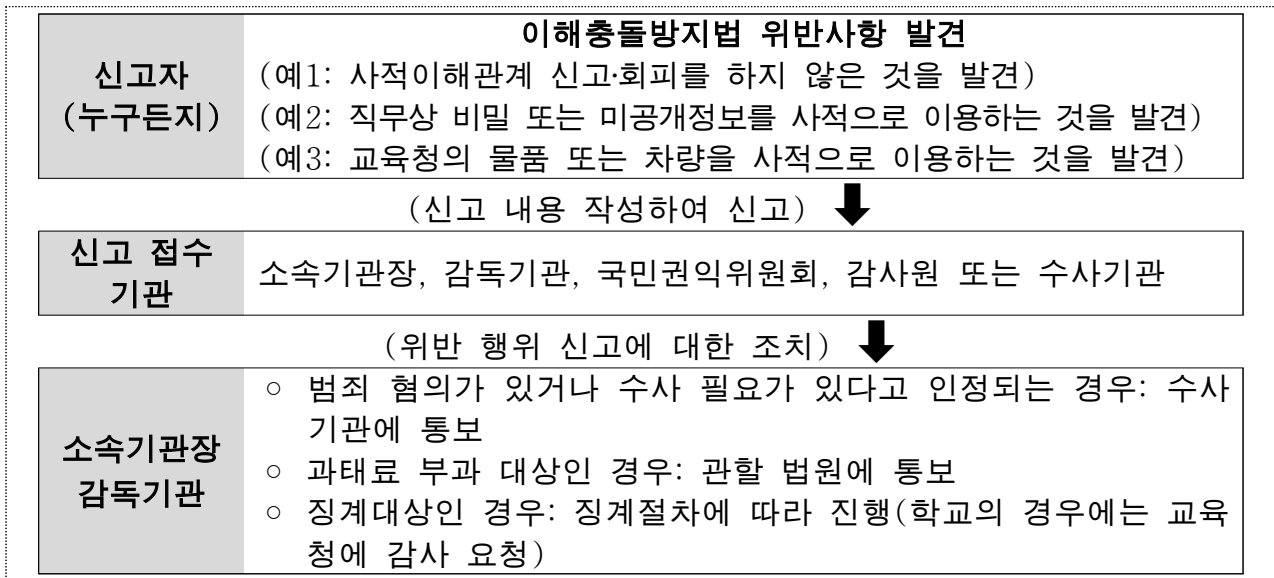
4. (이해충돌방지담당관)각종 상담 및 신고·신청·조치·점검·통보 등의 사항을 기록 및 관리[양식5, 6]

- 상담일지 별도 작성



- 신고·신청 내용(신고자, 신고일, 신고 내용 등)
- 조치사항 및 점검사항
- 조치결과 통보 내용

5. 법 위반 행위의 신고



가. 신고방법

- 누구든지(공직자, 직무관련자, 일반 국민 등 모두 해당)
-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10가지 행위 기준 모두 해당)
-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신고

나. 신고내용[양식7]

- 신고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등)
-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의 성명(법인명), 연락처(법인 소재지), 직업(법인 대표자의 성명)
- 신고의 경위 또는 이유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증거자료
※ 증거자료는 확보한 경우에만 제출

다. 신고에 대한 조치(이해충돌방지담당관)[양식8]

-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
- 징계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감사 요청 등)

6. 기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의무

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나. 법 위반 행위 신고자의 신분보호 조치

-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이해충돌방지 교육

- 매년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교육 계획 수립(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 포함)
- 소속기관 공직자등에게 매년 1회 이상 교육 실시

라. 모든 교직원 대상 반기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연 2회)

- 작성 시기: 1월, 7월(학교 교직원은 3월, 9월)
 - ※ 상·하반기에 각각 작성하되, 작성시기는 기관 실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모든 교직원 대상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공통사항) 작성 후 보관 [양식9]
 - ※ 그 외 분야별(인사, 재정보조, 수익계약, 성적평가 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분야별 체크리스트 활용 가능

7.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일부 규정 적용

-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 직무상 비밀 등의 이용 금지
- 위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조치
- 부당이득의 환수 등

나.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 사전 교육 제공[교육자료 참고(예시)]

[예시: 공무수행사인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사전교육자료]

※ 본 교육자료는 예시 자료이며, 각 기관(부서) 실정에 맞게 편집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00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자료

□ 이해충돌의 정의 (법 제2조제4호)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공직자는 아니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소집되어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 이해충돌방지법 규정을 적용함

□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심의안건의 대상자가 위원 본인의 사적이해관계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
- ※ 회의 소집일 이전에 회의 안건의 내용을 전달 받았을 때, 회의 참석 전에 사적이해관계여부를 판단하여 신고 등 조치
- 신고 및 회피 신청에 따른 위원 제척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
- 위반 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재산상 이익 환수

사적이해관계자(법 제2조제6호 각 목)

가. 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위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위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위원 자신이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공정한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직무 상 비밀 등의 이용 금지

-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됨
-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여부를 따지지 않음
- 위반 시, 징계 및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 벌금,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 [양식1]

※ 본 양식은 예시양식이며, 각 기관 실정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음영 부분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작성합니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	--	-----	--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직무 관련 업무	16개 직무 중 해당되는 직무 작성	세부 업무
		예시) 계약	예시) oo공사 수의계약

직무 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공직자와의 관계	예시) 공직자 본인의 배우자가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

참고 자료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양식2]

※ 본 양식은 예시양식이며, 각 기관 실정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음영 부분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작성합니다.

사적 이해관계자 기피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의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직급)	
기피 신청 사유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양식3]

※ 본 양식은 예시양식이며, 각 기관 실정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음영 부분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작성합니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	
------	--	-----	--

직무관련자의 인적사항	성명		소속		연락처	
----------------	----	--	----	--	-----	--

직무관련자와 거래한 자의 인적사항	성명		소속		연락처	
	공직자와의 관계					

거래내용 *해당되는 거래유형에 (O) 표시	거래일					
	금전(유가증권 등) 거래	()	(거래금액, 거래원인, 거래내용 등 세부내용 작성)			
	부동산 거래	()	(거래금액, 거래원인, 거래내용 등 세부내용 작성)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	(거래금액, 거래원인, 거래내용 등 세부내용 작성)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 [양식4]

※ 본 양식은 예시양식이며, 각 기관 실정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음영 부분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작성합니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	--	-----	--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직무 관련 업무	16개 직무 중 해당되는 직무 작성	세부 업무
		예시) 계약	예시) oo공사 수의계약

퇴직자	성명		
	연락처		
	소속	퇴직 전 소속	현 소속

접촉사항	접촉일시		
	유형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	
	접촉사유		

참고 자료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본 양식은 예시양식이며, 각 기관 실정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글파일 이외의 파일형식으로 편집 가능)

[illegible]

- 22 -

■ [양식6]

※ 본 양식은 예시양식이며, 각 기관 실정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일지

상담일시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 기타()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 [양식7]

※ 본 양식은 예시양식이며, 각 기관 실정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의 신고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직업			
	연락처			
법 위반자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법인 또는 단체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대표자 연락처		
		법 위반자가 대리인 또는 종업원인 경우 추가 작성	성명	
			연락처	
			그 외 인적사항	
법 위반 행위	신고의 경위 및 이유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위반행위 내용	발생일시		
		발생장소		
		내용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증거자료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양식8]

※ 본 양식은 예시양식이며, 각 기관 실정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 행위 통보 공문 예시

수신 ○○○○ 지방법원 (또는 ○○○○경찰서)

(경유)

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실 통보 (또는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조제○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 (또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제○항 (또는 제27조○항)에 따라 그 위반사실을 통보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합니다.

- 붙임 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내역서(양식6 활용) 1부.
2. 증거자료 1부. 끝.

담당	팀장	부서장
협조자		
시행		접수
우		
전화번호	팩 스 번 호	

■ [양식9]

※ 본 양식은 예시양식이며, 각 기관 실정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공통 일반사항 >

- * 직무관련자: 직무수행의 대상, 상대방이 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단체
- * 특수관계사업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자 가 진 단 항 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이 직무관련자입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단체·개인이 직무관련자입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본인 또는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입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본인이 재직하였거나,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법인·단체·개인이 직무관련자입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같은 기관(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입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 등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매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본인, 가족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직자 본인의 직무관련자와 금전(유가증권 포함) 거래, 부동산 거래, 물품·용역·공사 계약 등 사적거래가 있는 등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분양, 구매, 경매, 입찰 등의 행위는 제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공직자 본인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의 기회를 얻거나 대가 제공에 대한 제의를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직무 수행 중 알게된 비밀 또는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퇴직 후 본인의 재취업 기회 또는 가족의 채용을 제공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공용재산 등을 사적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모임 등의 사적 모임은 제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입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동료 직원,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제3자가 귀하의 직무수행이 이해충돌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위의 자가진단 항목에서 ‘예’라는 응답이 1개 이상인 경우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상담 또는 직무 회피를 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인사 업무 >

* 인사업무 : 채용 · 승진 · 전보 · 상벌 · 평가 등과 관계된 직무

자 가 진 단 항 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u>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u>)이 인사업무 대상자 입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본인 또는 가족이 인사업무 대상자와 금전(채무관계), 부동산, 계약 체결 등 사적 거래가 있거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본인 또는 가족이 인사업무 대상자로부터 편의, 향응 등을 제공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식사, 골프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인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 시, 제척·기피·회피·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각종 채용, 위원회 심의, 대상자 평가 및 선발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인사업무와 관련된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기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가 인사업무 대상자에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동료 직원이 귀하의 직무수행이 이해충돌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위의 자가진단 항목에서 ‘예’ 라는 응답이 1개 이상인 경우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상담 또는 직무 회피를 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3]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재정정보조 업무 >

* 재정정보조 업무 :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정보조를 제공하는 직무

* 특수관계사업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자 가 진 단 항 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u>생계를 같이하는</u>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이 재정정보조 대상자입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개인이 재정정보조 대상자입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본인이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2년 이내에 본인이 재직하였거나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법인·단체·개인이 재정정보조 대상자입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 퇴직 전 2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재정정보조 대상자입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본인, 가족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재정정보조 대상자와 금전(유가증권 포함) 거래, 부동산 거래, 물품·용역·공사 계약 등 사적거래가 있는 등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분양, 공매, 경매, 입찰 등의 행위는 제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본인, 가족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편의, 향응 등을 제공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식사, 골프, 교통 숙박비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퇴직 후 본인의 재취업 기회 또는 가족의 채용을 제공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재정정보조 대상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기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가 재정정보조 대상입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동료 직원,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제3자가 귀하의 직무수행이 이해충돌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위의 자가진단 항목에서 ‘예’ 라는 응답이 1개 이상인 경우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상담 또는 직무 회피를 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4]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수의계약 업무 >

- * 계약업무 담당자: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그에 대한 결재권을 행사하는 상급자를 모두 포함
- * 고위공직자등: 소속 고위공직자,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지방의회의원
- * 특수관계사업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자 가 진 단 항 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계약업무담당자 또는 고위공직자등이 수의계약 체결의 상대방입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1번 항목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포함)이 수의계약 체결의 상대방입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1~2번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수의계약 체결의 상대방입니까? 혹은 1~2번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가 수의계약 체결의 상대방입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계약업무담당자 또는 고위공직자등은 1~3번 항목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계약업무담당자와 고위공직자등 또는 그 가족 및 특수관계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수의계약 대상자와 금전(유가증권 포함) 거래, 부동산 거래, 물품·용역·공사 계약 등 사적거래가 있는 등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본양, 공매, 경매, 입찰 등의 행위는 제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계약업무담당자와 고위공직자등 또는 그 가족 및 특수관계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편의, 향응 등을 제공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식사, 골프, 교통 숙박비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퇴직 후 본인의 재취업 기회 또는 가족의 채용을 제공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수의계약 대상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기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가 수의계약 대상입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동료 직원,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제3자가 귀하의 직무수행이 이해충돌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위의 자가진단 항목에서 ‘예’ 라는 응답이 1개 이상인 경우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상담 또는 직무 회피를 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5]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성적, 수행평가 등 업무 >

자 가 진 단 항 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이 성적 등 평가 대상입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본인 또는 가족이 직무관련자(학생, 학부모 등) 금전(유가증권 포함) 거래, 부동산 거래, 물품·용역·공사 계약 등 사적거래가 있는 등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분양, 구매, 경매, 입찰 등의 행위는 제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본인 또는 가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편의, 향응 등을 제공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식사, 골프, 교통 숙박비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하고 대가 제공에 대한 제의를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직무수행중 알게된 비밀 또는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기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입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동료직원,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제3자가 귀하의 직무수행이 이해충돌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위의 자가진단 항목에서 ‘예’ 라는 응답이 1개 이상인 경우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상담 또는 직무 회피를 신청

IV.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1. 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	공직자1	공직자2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무원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임기제 등)	① 고위 공직자 ② 공무수행사인 ③ 공직자1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 (가족, 특수관계사업자 등)
각급 공립학교(유치원)	모든 교직원* (기간제 교원, 교육공무직원 등 포함)	
공직유관단체 [경기도교육연구원, 학교안전공제회 등]	임직원	

*학교와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님

**공직자2의 ③은 법 적용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사적이해관계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수의계약체결제한, 부동산 보유매수신고 등에서 간접적인 관계가 있음

2.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10가지 행위 기준

□ 이해충돌의 정의 (법 제2조제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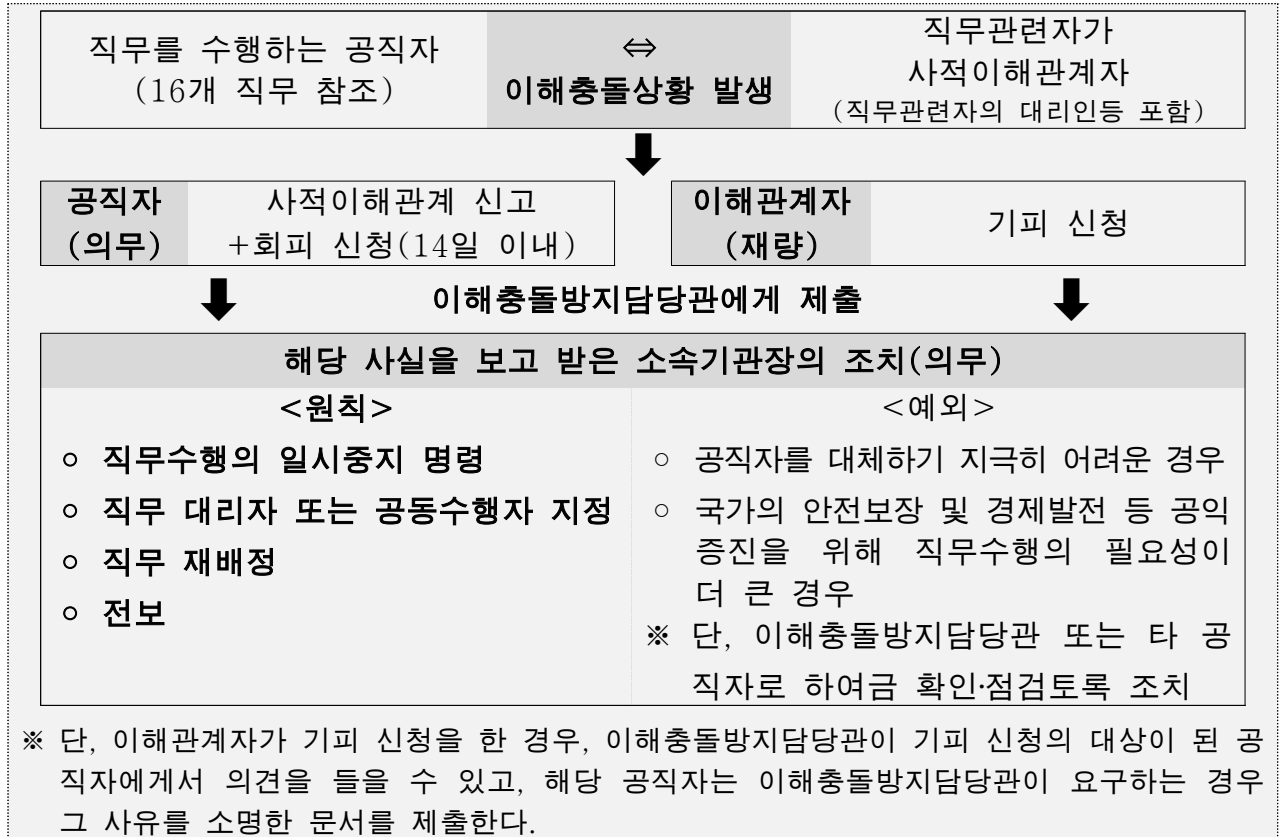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

-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 ⇨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국민신뢰 확보

신고 및 제출 의무	제한 및 금지행위
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2.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7. 가족 채용 제한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9.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10.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 이용 금지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제5조, 제7조]



- (신고의무자)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공직자
- (신고대상 직무)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16개 유형의 직무를 신고대상 직무로 규정

신고대상 직무(법 제5조제1항)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와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 **(직무관련자)**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 기준(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

직무관련자(법 제2조제5호)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간접적·반사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단체·법인 등은 직무관련자가 아님

- **(사적이해관계자)** 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자

사적이해관계자(법 제2조제6호 각 목)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신고·회피)**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하고 회피 신청
※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이 법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
- **(기피)** 직무관련자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직자에게 신고 및 회피의무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 신청
- **(적용제외)** 업무 성격상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의 예외(법 제5조제3항)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 **(신고에 따른 조치)** 신고·회피·기피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 조치 의무

신고에 대한 조치의 예외(법 제7조제2항)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 이때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함

- **(조치결과 통보)**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 신청자에게 통보
- **(위반시 제재)** 위반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공직자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Q1-1 공직자등의 범위에 교육공무직원도 적용되나요?

- A.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적용대상으로 교육공무직원도 공직자등에 포함되고, 교육청, 직속기관 등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직원은 비포함
- ※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도 적용 제외

Q1-2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안 날'은 언제를 말하나요?

- A.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날입니다. '안 날'이란 민원을 접수하거나 이를 보고받는 등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날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직자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은 위반사실을 통보할 책임이 있는 소속기관에게 있습니다.

Q1-3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에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이 포함되는데, 여기서 임원이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나요?

- A. 해당 법인의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은 설립할 때에 임원의 인적사항을 등기해야 하므로 등기된 사항을 실무적으로 확인하면 될 것이며, 참고로 비등기이사 등 임원에 준하는 자 또는 직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1-4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한 자를 말하나요?

- A.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주식 등의 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규정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행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상의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관련해서는 주식 지분은 30% 이상, 자본금은 50%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1-5

16개 직무와 관련해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상급자는 해당 내용을 보고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급자도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나요?

- A.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해당 사안을 직접 처리하지도 않고, 보고를 받지도 않는 상급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의 직무상 권한이 미치는 사안에서 사적이해관계가 발생하였음을 어떤 식으로든 알게 되었다면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Q1-6

소속기관장에게 사적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기관장이 스스로 직무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요?

- A. 소속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 신고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최종적인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기관장은 결정과정에서 배제되므로 소속기관장이 스스로 직무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소속기관장에 대해 직무수행 일시중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공직자가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공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Q1-7

직무관련자인 사적이해관계자와 직무와 관련하여 전화 질의 또는 상담 등을 한 경우에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A. 직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응답, 상담에 대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전화 질의 또는 상담을 통해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1-8

인사업무 담당 공직자 A의 배우자, 자녀 등(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이 승진(전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대상에 해당하나요?

A. 승진(전보)대상자인 공직자 A의 배우자, 자녀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인사 담당 공직자 A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직무관련자)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6호 가목에 따라 인사업무 담당 공직자의 가족에 해당하여 '사적 이해 관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사업무 담당 공직자 A는 자녀가 승진(전보)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하여야 합니다.

Q1-9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의 배우자가 피조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해충돌방지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은 모든 감사업무에서 배제해야 하나요?

A. 감사담당관은 교육지원청에서 배우자 조사와 관련된 피조사자 신분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관련 감사를 회피하여야 합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는 등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회피 신청한 감사담당관은 배우자 조사와 관련된 감사에서만 배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1-10

공무원A가 학원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같은 부서 동료 B의 동생이 학원 인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이 경우 공무원A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A.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인허가 업무 담당자인 공무원A와 부서 동료 B의 동생은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A 스스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관 실정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상담 등을 통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

- (신고의무자) 각종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 ※ 해당기관에서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소속기관 업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의무 발생
 -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 개발공사,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공사 및 도시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소속의 공직자
 - 위의 공공기관 외에 택지 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 (신고내용) 공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내역
 - ※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에 따른 조치) 부동산 보유·매수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 조치 의무
- (조치결과 통보)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해당 공직자에게 통보
- (위법한 부동산 보유·매수 시) 소속기관장은 신고를 받은 부동산 보유·매수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감사원·감독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고발조치해야함
- (위반시 제재) 위반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공직자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Q2-1 우리 교육청도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나요?

- A.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각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공사 및 도시공사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에 포함될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신고 대상 공직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부동산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인사·조직업무 담당 등 다른 업무담당자라도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관련 부동산을 보유 매수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합니다.

3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제8조)

- (제출의무자) 임용일 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에서 업무를 수행한 고위공직자(「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 공개 대상자)

고위공직자의 범위(법 제2조제3호)

- 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다.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바.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 사.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아.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
- 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차.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 카. 다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차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라목·마목·아목 및 차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된다.
- 타.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 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제출내용)

- ①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근무처, 소재지, 대표자, 직위(직급), 주요 업무 내용
- ②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활동처, 소재지, 대표자, 주요 업무내용
- ③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 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 공직 임용일 또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정부, 지자체, 국공립학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에서의 활동은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 해당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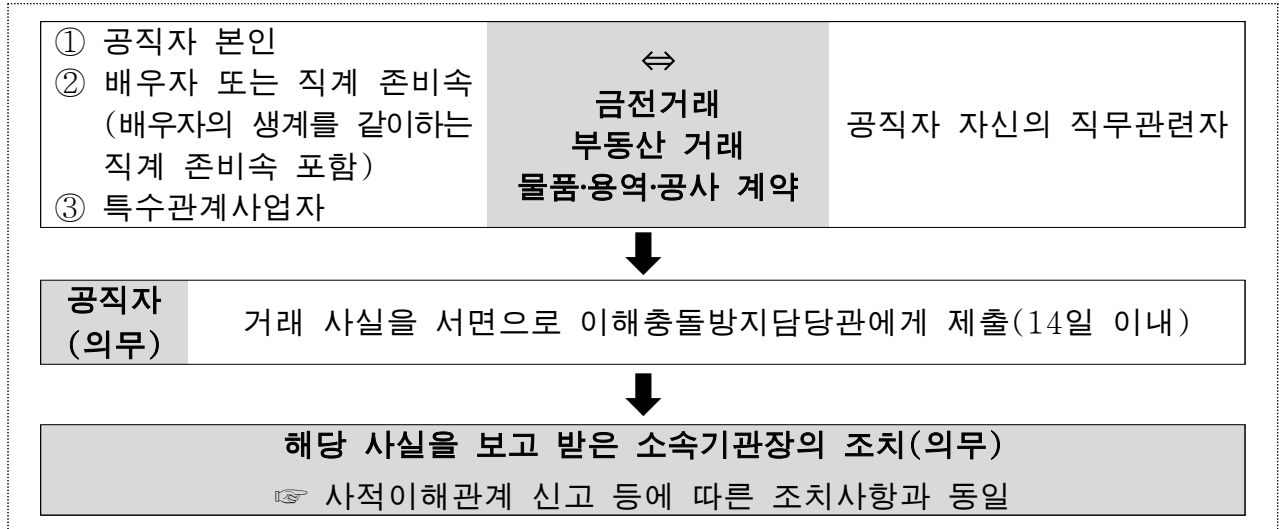
- (조치) 소속기관장은 제출받은 업무활동 내역서를 보관·관리하며, 다른 법령에서 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활동내역을 공개할 수 있음
- (위반시 제재) 제출의무 위반시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Q3-1

고위공직자의 범위에서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에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의 장도 포함되나요?

A.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의 장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 (신고의무자) 공직자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를 한 공직자
 - *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와 직무수행이 종료된 과거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의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가 제외됨
- (신고내용)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또는 유가증권 거래행위, 부동산 거래, 물품·용역 계약 체결 등 사적 거래 행위
 - ※ 사적 거래행위가 있을 예정이거나 이미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신고 대상 거래 행위(법 제9조제1항)

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단, 금융회사 등이나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

나.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단,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 공매·경매·입찰에 의한 거래 행위는 제외

다.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단,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등은 제외

- (신고에 따른 조치) 공직자가 신고한 사적 거래행위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은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음
- (조치결과 통보)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해당 공직자에게 통보

- (위반시 제재) 신고의무 위반시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Q4-1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기타 물품 등을 거래할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 A.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부당한 거래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금융회사나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와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부정거래 위험성이 낮은 공개 분양·공매·입찰을 통한 거래 등도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체결 행위도 신고대상에서 제외됨으로, 현실적으로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 ※ 거래 상대방인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인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4-2 직무관련자와 부당한 거래가 아님에도 해당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 A. 동 규정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부동산 거래 등을 통해 편법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직무의 공정성 담보차원에서 직무관련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라 할지라도 신고토록 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일상생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이나 부정거래 위험성이 낮은 공개 분양·공매·입찰을 통한 거래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지나친 규제로 볼 수 없습니다.
- 예컨대, OO학교의 학습준비물 거래업체 △문구점에서 공직자 A가 사적으로 필요한 문구류를 정당하게 구입하였다면, '일상생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등'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Q4-3 공립학교 교사의 배우자가 부동산 계약 당시, 계약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가 가르치는 학생의 부모(직무관련자)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교사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거래 상대방이 배우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공직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태료는 위반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합니다. 다만, 공직자가 거래 상대방이 직무관련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단순히 몰랐다고 부인한다고 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고의 과실 요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그 위반 사실을 통보할 책임이 있는 소속기관(또는 이와 관련된 수사기관)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 한편, 상기 거래행위를 알게된 공직자는 사후에라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Q4-4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추후 직무관련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나요?

- A.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추후에 직무관련자가 되었다면 직무관련자가 되는 시점에 신고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자와 관계가 성립되기 전에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는 등 거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닌 이상,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Q4-5

직무관련자인 친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시중 은행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A. 비록 친구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자와 금전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자의 지급 여부는 신고 의무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4-6

공직자의 가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로 부당이득을 얻었을 경우 공직자의 소속 기관장은 이를 환수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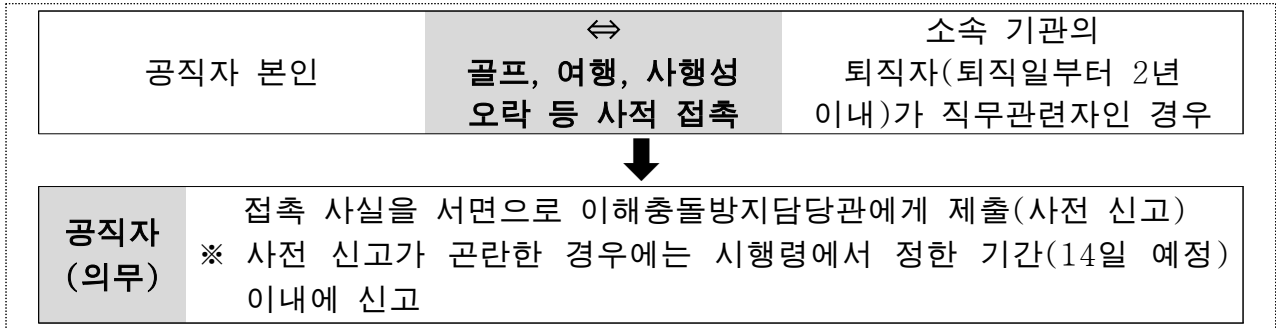
- A.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계없는 공직자의 가족과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의 계약 또는 거래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득은 공공기관에 손해가 없는 것으로서 이해충돌방지법 제22조의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공직자의 가족과 공직자의 직무관련자 간의 거래는 사인 간의 거래이며,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다른 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해당 거래가 뇌물이나 금품수수에 해당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형법이나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될 사항입니다.
- 이와 별개로 공직자 본인은 상기 거래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Q4-7

공무원A가 같은 또는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동료인 공무원B에게 금전을 차용하고 시중 은행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A.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면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 다만, 추후에라도 직장 동료 간에 직무관련자(인사, 감사 등) 관계가 형성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자의 지급 여부는 신고 의무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5조)



- (신고의무자) 모든 공직자
- (신고내용)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신고
※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사적이해관계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법상 다른 의무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직자와 퇴직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신고 등에 해당될 경우 모두 신고하여야 함
- (적용제외)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함
- (위반시 제재) 신고의무 위반시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Q5-1 사적 접촉 신고의 제외 대상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A. 직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모임, 종교행사 등의 사적모임에서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을 접촉하는 경우 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Q5-2 '소속기관의 퇴직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A. 퇴직공직자가 직제, 정관, 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였던 국·과·실(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을 의미합니다. 퇴직공직자가 기관장인 경우 부서의 범위는 해당 기관 전체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국·과·실(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서)이 다르더라도 기관의 규모가 작아 부서의 구분이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자의 사실상 부당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Q5-3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과의 모든 사적 접촉이 신고대상인가요?

- A.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에 의거 직무관련이 있는 퇴직자와의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제10조)

- (제한대상자) 모든 공직자
- (제한행위)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열거하여 금지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3. 공직자가 소속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 (적용제외)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
- (위반시 제재) 위반시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Q6-1

직무관련자에게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는 것이 사적인 외부활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공문 등을 통해 자문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아야 합니다.

Q6-2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등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 공직자 자신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도 금지된다는 의미인가요?

A.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그 상대방인 제3자를 위해 조언 자문 등을 할 경우 소속 공공기관의 이익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공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속 기관이 이해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상대방인 제3자를 위해 조언 자문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Q6-3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립학교(유치원), 학교법인 등을 대리하는 것은 가능한지?

A. 본 조항은 원칙적으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겸직금지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유치원), 학교법인 등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 공공기관이 이해당사자인 사안에서는 공직자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그 상대방인 제3자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속 공공기관이 이해당사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의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대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Q6-4

교사의 직무관련자인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교폭력위원회 사안과 관련하여, 조언·자문 등을 요청하였을 때에도 이 법에 따른 제한사항에 해당되나요?

A. 해당 조언·자문 등이 사적으로 제공하는 조언·자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사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학생지도의 일환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때에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6-5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하여야 하나요?

A.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적으로 조언이나 자문 등을 제공하였더라도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등 위반등에 여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7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 (제한대상자)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 소속 고위공직자, 채용업무 담당자, 감독기관(또는 모회사)의 고위공직자
 - ※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의 가족으로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가 있는 가족의 범위와 동일함
- (제한행위) 제한대상자의 가족이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다수인 대상 경력 경쟁채용시험 등 경쟁 절차 없이 채용될 수 없음
 - ※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에 자신의 가족이 경쟁절차 없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금지
 - ※ 다른 법률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 (적용제외) 공개경쟁시험, 경력경쟁채용 시험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가족 채용 제한 적용 제외 사유(법 제11조제2항)

가.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 포함)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시험에 합격한 경우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하던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하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위반시 제재) 위반시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 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Q7-1

‘채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채용업무를 실무로 담당하는 공직자 이외에 채용업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는 결재권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공직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에 따라 교육장이 채용하는 직종의 경우, 교육장의 채용 제한 적용 범위는 관할 지역 모든 기관(학교 포함)까지입니다.

Q7-2

교육지원청 인력풀에 등재되어 있는 대체직원을 우선 채용하려고 합니다. 인력풀 등재자가 있는 경우 공개경쟁채용절차를 하지 않고 채용할 수 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 A. 인력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공고 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제한대상자의 가족 채용에 대해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가족 채용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7-3

'다른 법률에서 제한대상자의 가족 채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 A.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결격사유)에 따르면, 국회의원 본인이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가족 채용 허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적인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가족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Q7-4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1개월 미만 정규교원 결원 발생시,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에, 가족도 해당 규정에 따라 공개적인 경쟁절차 없이 채용할 수 있나요?

- A.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제한대상자의 가족 채용에 대해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가족 채용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 (제한대상자)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 소속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자, 감독기관·모회사의 고위공직자,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감사·조사권 있는 지방의회의원 등과 그 가족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받는 공직자 및 가족(법 제12조제1항)

- ① 소속 고위공직자
-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 ⑥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 ⑦ ①부터 ⑥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⑧ ①부터 ⑦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 ⑨ ①부터 ⑦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제한행위) 제한대상자와 수의계약 체결 금지
 - ※ 고위공직자 등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비속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하는 행위 금지
- (적용제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위반시 제재) 위반시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 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Q8-1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의 개념에는 계약부서 담당자만 포함되나요?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가 다른 경우 대상자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A. 법령상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령에 따라 계약과 관련된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그에 대한 결재권을 행사하는 공직자를 의미하며, 사실상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계약을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사업부서의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법령상의 계약부서 실무자·결재권자, 사실상의 사업부서 실무자와 결재권자 모두 적용됩니다.

Q8-2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을 말하나요?

A.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Q8-3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 담당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것은 공직자 가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나요?

A. 공적 업무수행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의 가족 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 법령(지방계약법 등)에서도 가족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이외에도 입찰 등 경쟁절차를 통해 계약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9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수익 금지(제13조)

- (제한대상자) 모든 공직자
- (제한행위)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 ※ 사적인 용도의 사용·수익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기관 물품 등을 본래의 제공 목적을 벗어나 개인적 편의나 이득을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
- (적용제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 (위반시 제재 등)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
 - 위반시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Q9-1

A학교 교직원이 B학교가 소유(또는 임차)하고 있는 물품을 빌려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위반인가요?

A. 다른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공용물이 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것인 이상, 그것을 '사적'으로 사용한 공직자가 그 공공기관 소속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다른 공공기관의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그 공용물이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 묵인 등을 한 공직자도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Q9-2

학교의 공유재산인 토지에 교직원이 농사를 지어 수확한 작물을 다른 교직원과 나누어 먹는 것도 위반에 해당하나요?

A. 모든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므로 해당 행위의 위반 여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9-3

학교의 예산으로 집행하여 가입한 교수학습자료 이용 사이트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가입한 학교에 가입한 교직원 수만큼 경품을 지급할 경우 교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수령해도 되나요?

A. 해당 경품은 학교의 예산 집행에 따른 부수적인 혜택으로 개인이 수익할 수는 없고, 학교 비품 또는 소모품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9-4

업무용차량과 구분되는 전용차량(업무용차량이 아님)을 배정받은 공직자등은 출·퇴근에 한하여 전용차량의 사적사용이 가능한가요?

A. 「공용차량관리규정」 제10조의제2항 및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에서는 승용(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만 출·퇴근 등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전용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 행정안전부 답변자료]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차관에게 배정되는 전용차량으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 법적근거는 공용차량관리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업무용차량의 사적사용금지”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차량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

Q9-5

외부강의등에 출강할 경우 공용차량(업무용, 전용포함)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있거나 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외부강의등에 대해 출장 및 공용차량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연가, 외출, 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하고 공용차량 이용도 제한됩니다.

Q9-6

통학버스를 직원 친목회 행사로 이용 가능한가요?

A.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나 업무수행 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친목회 행사를 위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제14조)

<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	< 사적 이용 금지 >
<p>(공직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p> <p>－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자(퇴직자)를 포함하며,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정한 바에 따름</p> <p>(제3자)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금지</p>	<p>(공직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p> <p>－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이 없었더라도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p>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이란?

: 정보의 귀속이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것으로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된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

※ 미공개 정보 란?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

○ (위반시 제재 등)

구분		금지 행위 위반 내용	처벌
공직자	재산상 이익취득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 벌금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사적 이용	사적 이익을 위해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 하도록 한 공직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3자	재산상 이익취득	공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 취득한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한 자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Q10-1 '사적 이익'이란 경제적 이익만을 말하나요?

A. '사적 이익'은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인 이익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게 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Q10-2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민간인 신분인 일반인에게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알려주어, 일반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일반인도 처벌되나요?

A.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서는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이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민간인(제3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10-3 제3자가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임을 모르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A. 제3자가 미공개 정보인지 여부를 알지 못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Q10-4 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장으로 퇴직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퇴직 전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미공개정보로 수익 창출이 없는 상담 또는 외부 강연 활동을 하게 된 경우에도 제한되나요?

A.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사적 이익'이란 비경제적인 이익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상 이익이 없다하더라도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퇴직자의 경우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까지 포함합니다.

Q10-5 직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알려주었으나, '이용'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A.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형식상 '이용'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최종 결정이 되었다면 본 법령에 따른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 다른 법령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 공무수행사인

- 민간기관 등에서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등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제16조제1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제1항)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

(1)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 예시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등

-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한정되고,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조례·규칙 포함)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

< 예시 >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른 향토사교육지원협의회,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1-1호(2021.1.4.)」에 따른 지역사회학습장심의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202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교육공무원성과급심사위원회 등

[2]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관 사무를 위임·위탁하여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 예시 >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연수교육을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변경·폐업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

-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서 제외 (’16. 12. 22.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TF)

참고 사례

’16. 9. 조사 시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원장과 직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었으나, 해석지원TF 해석에 따라 직원은 공무수행사인에서 제외(대표자인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3]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민간인

- 민간부분에 소속된 사람이 그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공기관에 파견되어 공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 예시 >

체육협회 등에서 학교에 파견하는 운동부지도자, 학생 심리 상담을 위한 학교 파견 상담사 등

- 공공기관에 파견이 법령에 근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계약에 따라 파견된 경우도 포함

[4]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심의·평가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 판단·결정을 내리는 감리, 기술검토, 검사, 인증 등도 포함

< 예시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의 학교운영 전반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 「경관법」 제28조의 건축물의 경관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등

-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은 심의·평가 권한을 위임·위탁받지 않았더라도 심의·평가를 하는 이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및 법 적용

-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같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며, 청탁금지법의 경우에도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

이해충돌방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제7조) ▶ 직무상 비밀 등의 이용 금지(제14조) ▶ 위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조치(제21조*) * 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 ▶ 부당이득의 환수 등(제22조제1항·제3항)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제25조제1항)
청탁금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제5조, 제6조)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7조)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 ▶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제8조, 제9조) *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규정은 미적용 *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공무수행사인 행위 제한 사례

- 권익위 전원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중인 A로펌 변호사는 해당 로펌이 권익위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청구의 대리인으로 참여한 사건에 대해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시 사전에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해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소속기관의 심의·의결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중인 공무수행사인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 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한 것을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공무수행사인의 직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심의·의결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중인 공무수행사인이 해당 공공기관이 생산한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역할과 제도 운영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반부패청령담당서기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유치원), 공직유관단체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 (청탁방지담당관) 겸임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역할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 ▶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경기도교육청만 해당)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 ▶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 ▶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비밀누설 금지대상 직무(법 제23조)

- ※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관련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 포함)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에 관한 업무
-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소속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 교육 의무(제24조)

- ▶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함
- ▶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등록부 등 증빙)

5.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 제재 유형

- 부당이득의 환수 등(제22조)
법을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 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해 소속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이용 등을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 포함)
- 몰수 및 추징(제27조제6항)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공직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은 몰수(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
- 징계 및 벌칙(제26조, 제27조)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및 벌칙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및 벌칙

□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및 벌칙

구분	위반행위	제재내용
징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공직자	징계처분
형벌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고등을 방해,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사목	
과태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자료제출, 출석 또는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3천만 원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천만 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사목

-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벌칙

구분	위반행위	제재내용
징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공직자	징계처분
형벌	직무상 비밀·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병과 가능)
	공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 취득한 비밀·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병과 가능)
	사적 이익을 위해 직무상 비밀·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3천만원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이 제12조제1항 각호의 자와 수익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2천만원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공공기관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공직자	1천만원
	임용·임기 개시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V. 법령 비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1. 유사 법령 용어 정리

구분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자	법에 규정한 공공기관의 공직자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장과 임직원, 국공립 학교장과 교직원	법에 규정한 공공기관의 공직자 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장과 임직원, 각급학교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헌법기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국공립 각급학교	헌법기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공무원이 근무하는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 각급학교 등
공무수행사인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제16조제1항) → 일부 규정 준용(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제11조) → 일부 규정 준용(제5조~제9조)	
고위공직자	국가 및 지자체의 정무직 공무원, 일반직 1급 및 그에 상응하는 별정직 공무원, 사·도교육감 ,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차관급 이상 공무원(제5조의 2)
직무관련자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제2조제5호)	직무관련자가 아닌 ' 직무관련성 ' 여부로 판단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제2조제1호)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제2조제2호)
사적이해관계자	공직자 자신, 그 가족(민법 제779조*) 그 외 제2조 제6호의 각 목의 경우	사적 이해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 누구든지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금지	공무원 자신, 4촌 이내 친족 그 외 제5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담당관 지정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청탁방지담당관	행동강령책임관

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비교

이해충돌방지법(시행 2022.5.19.)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p>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제5조, 제7조)</p> <p>· 법 제5조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p> <p>·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명령 2. 직무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p> <p>3. 직무재배정 4. 전보</p>	<p>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5조)</p> <p>·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하고 다음 각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p> <p>· 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p> <p>3. 직무재배정 4. 전보</p>
<p>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p> <p>·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부동산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다음 각호의 사람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14일 이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p> <p>1. 공직자 자신, 배우자 2.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p>	<p>현행 규정 없음</p>
<p>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제8조)</p> <p>·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개시 전 3년 이내 민간부문 활동내역을 임기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업무내용</p> <p>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p> <p>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p> <p>·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 활동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p>	<p>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5조의2)</p> <p>· 차관급 이상 공무원(고위공직자)은 임용 또는 임기개시 전 3년 이내 민간부문 활동내역을 임기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내용</p> <p>2. 관리 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p> <p>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p>

이해충돌방지법(시행 2022.5.19.)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p>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p> <p>▶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사업자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하여야 한다.</p> <p>1. 금전 및 유가증권 거래행위 2.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 거래행위 3.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체결 행위</p> <p>▶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신고한 행위가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명령 2. 직무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재배정 4. 전보</p>	<p>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제20조)</p> <p>▶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직무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이내 포함)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신고(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 거래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p> <p>1. 금전 및 유가증권 거래행위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 거래행위 3.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체결 행위</p> <p>▶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조치사항 좌동)</p>
<p>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5조)</p> <p>▶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가능</p>	<p>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제5조의6)</p> <p>▶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가능</p>
<p>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제10조)</p> <p>▶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p> <p>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외부강의 사례금 및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 제외) 3. 소속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p>	<p>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5조의3)</p> <p>▶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p> <p>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직무인 경우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5. 그 밖에 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관련 행위</p>

이해충돌방지법(시행 2022.5.19.)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p>가족 채용 제한(제11조)</p> <p>·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p> <p>1. 소속 고위 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p> <p>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p> <p>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p> <p>단, 공개채용시험에서 합격하는 경우 등 제11조제2항 각호 예외</p>	<p>가족 채용 제한(제5조의4)</p> <p>· 고위공직자는 자신의 소속기관, 그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p> <p>· 인사업무담당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p> <p>·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p>
<p>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p> <p>·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 체결 불가</p> <p>1. 소속 고위공직자</p> <p>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p> <p>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p> <p>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p> <p>5. 해당 공공기관의 국회 상임위 위원으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p> <p>6.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 의원</p> <p>7. 상기 6호까지의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p> <p>8. 상기 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p> <p>9. 상기 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p> <p>단,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시 예외</p>	<p>수의계약 체결 제한(제5조의5)</p> <p>· 고위공직자 자신과 그 가족, 특수관계사업자는 고위공직자의 소속기관, 그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 체결이 금지</p> <p>· 계약업무담당공무원 그 자신과 가족은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p> <p>·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자신과 가족이 산하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p>
<p>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제13조)</p> <p>·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등을 사적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 금지</p>	<p>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제15조)</p> <p>· 공무원은 관용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금지</p>
<p>직무상 알게된 비밀 등 이용 금지(제14조)</p> <p>·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된 비밀 또는 소속기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p>	<p>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14조)</p> <p>·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투자를 돕는 행위 금지</p>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매뉴얼

총괄

이홍영(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기획

박상열(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서기관)

김휘도(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사무관)

정준남(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주무관)

개발

김미리(안산교육지원청)

김현주(평택교육지원청)

송화정(광주하남교육지원청)

안희상(의정부교육지원청)

염지인(김포교육지원청)

윤종철(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이근행(연천교육지원청)

이대선(화성오산교육지원청)

전필준(안성교육지원청)

정민지(시흥교육지원청)

지원

김영준(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장학사)

이기영(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주무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2021. 10.